



보 도 자 료
국회의원 이 양 수
(강원 속초고성양양)

 자유한국당

2018. 09 17

국회의원회관 938호 Tel 02-784-8150~2 Fax 02-788-0216 담당자 김재철 보좌관

- 1. PLS 시행 5년 유예하자던 농진청, 1년만에 180도
입장 바뀐**
- 2. 농진청 직원 미승인 LMO 목화 생산·분양, 등잔
밑은 역시나 어두웠다**
- 3.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쌀 소비촉진 연구 및 기술보급
방안마련 필요**

1. PLS 시행 5년 유예하자던 농진청, 1년만에 180도 입장 바뀌

○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수확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PLS제도가 시행될 예정임

※ PLS(Positive List System,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)

- 등록된 농약에 한해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내에서만 농작물에 사용토록하고,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에 일률기준(0.01ppm)을 적용

○ 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하고 수입농산물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종의 비관세장벽 효과를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

○ 농촌진흥청은 PLS 제도의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

○ PLS제도 전면시행을 앞두고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2년간 추진(1년차:약효약해, 2년차:잔류성)해온 농약 직권등록을 '18은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

○ 특히 등록된 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재배작물 농약직권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에는 적용대상을 늘려 올해안에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함

-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 적용대상을 ('17)1,223→('18) 2,893으로 1,670개 확대하여 농약직권등록시험 진행

- 하지만 불과 1년 전 농진청은 식약처에 발신한 PLS관련 개정 고시에 대한 검토의견 공문에서 PLS유예 입장을 내놓았는데 5년간 유예하자는 것임(농자재산업과-9412, 2017.10.10.)
 - 유예하는 이유는 부적합율 상승으로 인한 폐기 농산물 증가가 예상되며, 소면적 작물의 다양화 및 외래병해충의 유입으로 방제대상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,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부족하기 때문에
 - 전면시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농약의 등록 및 잔류 허용기준을 충분히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기간(5년 수준) 동안 시행을 유예한 후 2023.1.1.부터 전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
- ☞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농산물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당장 시행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인가? 직을 걸어서라도 막아야 했던 것이 아닌가?
- 수입 및 국내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농산물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도도입은 필요하지만 졸속한 시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떠 앉게 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받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람

2. 농진청 직원 미승인 LMO 목화 생산·분양, 등잔 밑은 역시나 어두웠다

- 작년 5월 GMO 유채꽃 파동이 발생해 검역 부실의 논란으로 검역당국이 많은 비난을 받았음
- 유전자 변형식물은 우리나라 생태계에 혼란을 줄 위험이 있어서 관계 당국의 끊임없는 주의가 필요함
-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립종자원은 정기적인 유통조사와 특별사법 경찰 운영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
- 하지만 작년 말에 목포에서 미승인 LMO 목화가 검출되면서 다시 한 번 사회적 파장이 있었음
 - 국립생태원의 3회에 걸쳐 7개 지점에서 면화 213개를 무작위 시료 채취해 검사한 결과 36개 양성반응이 나옴
 - 발견된 LMO 면화는 미국 몬산토 사가 개발한 MON531.으로 식약처에 의해 국내 사료·식용으로 승인됐으나 재배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종임
-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등잔 밑이 언제나 어두운 것처럼 목포에서 검출된 미승인 LMO 목화의 출처는 바로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식량 과학원 직원이었다는 사실이 농진청 자체 특정감사 결과 밝혀 졌다는 것임

- 목화 종자순도를 관리하는 전담 연구 담당자가 없이는 목화 종자의 생산이나 분양을 할 수 없는데, 해당 기관 연구소 소장은 이를 무시하고 목화종자를 생산·분양하였고
 - 이 뿐만 아니라 목화 종자를 관리하는 직원들의 업무 분장이 되어있지 않아 목화 종자의 생산과 분양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음
 - 심지어 유전자원관리담당자는 시험포장 및 종자관리 소홀로 출처가 불명확한 일본수집종자가 유입되어 외부로 분양됨
- 해당 미승인 LMO 목화는 목포시에서 축제를 위해 2년간 심었지만, 이번 검출을 통해 전량 폐기하여 20억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남
- ☞ 한 쪽에서는 단속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직원이 미승인 LMO 작물을 생산·분양하는게 정상적인 모습인지?
 - ☞ 더구나 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은 단순 경징계와 주의, 경고에 그쳤는데, 이것이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,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지?

3.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쌀 소비촉진 연구 및 기술보급 방안마련 필요

- 올해 벼 재배면적(73만 8천ha)은 '17년 대비 1.7만ha 정도 감소(2.2%)되었으나, 쌀 소비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쌀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
- 현재 정부재고 비축미는 160만톤('18.8 말 기준)으로 이에 따른 보관료는 2017년 975억원이 발생

<표 1. 최근 5년간 쌀 수급 관련 자료>

구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(8월)
재배면적(천ha)	833	816	799	779	755	738
생산량(천톤)	4,230	4,241	4,327	4,197	3,972	-
수입량(천톤)	526	280	438	287	382	-
소비량(천톤)	4,493	4,436	4,199	4,220	4,439	-
1인당소비량(kg)	67.2	65.1	62.9	61.9	61.8	-
재고량(천톤)	801	874	1,354	1,747	1,888	1,600
수출량(천톤)	1.5	1.7	2.0	2.3	-	-

<자료 출처 : 통계청 국가통계포털, 농림축산식품부,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>

-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금년에 벼 재배면적 3만5천ha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, 향후 2년간 쌀생산조정제 추진을 통해 10만ha를 추가로 감축해 나갈 방침
- 최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, 가공용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
 - 1인당 쌀 소비량 : ('00) 93.6kg/년 → ('05) 80.7 → ('10) 72.8 → ('17) 61.8
 - 가공용 쌀 연간 소비량 : ('14) 535천톤 → ('15) 575 → ('16) 659 → ('17) 708

- 쌀가공업체는 '16년 말 약 19,082업체(쌀 소비능력 1천톤 이상 업체는 62곳(0.36%)에 불과)가 있으며, 총 매출액은 4.4조 원 규모로 '08년(1.8조원)대비 144.4% 증가함
- 해외에 경우 일본은 'R10프로젝트'를 추진하여 쌀 소비량 10%를 쌀가루로 전환하는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
-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선 쌀의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만큼 궁극적으로 쌀 소비를 활성화 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
- 이를 위한 대안으로 쌀 가공산업 활성화 정책이 있고 농진청은 최근 5년간 쌀 품종개발에 243억원, 쌀 가공기술개발에 96억원 등 총 339억원을 투입하고 있음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쌀 가공업계는 높은 원료비 부담으로 수입쌀, 국산구곡 등 정부의 저가 쌀 공급에 의존하고 있음
 - 중단립종 주요 수출 국가인 중국, 미국 대비 2~3배의 생산비 소요
- ☞ 쌀 소비 촉진 정책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쌀빵, 쌀국수, 쌀라면, 주류 등 가공식품에 쌀 원재료 사용과 새로운 수요 발굴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?
- ☞ 쌀 소비촉진을 위한 농진청의 연구방향과 지원대책은 무엇이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방안은 무엇인지? 쌀 가공업계의 높은 원료비 부담을 줄일 방안은 무엇인지?